

오피니언

월/요/광/장

손용엽



일본경제의 거품 위기가 시작되었던 1987년 이후 일본의 경제상황에 대해 다카하시조센(高橋兼亨)은 '사라진 일본경제의 기적'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은 아직 약했다. 엔고 아래에서 생산 투자는 해외에 거점을 두는 것이 주류가 되었으므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국내에서의 설비투자에 눈을 돌리려는 기업은 별로 없었다. 그러자 은행은 예금 운용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게 됐고, 주식이나 토지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던 것이다." "거품 광풍은 기업이나 개인들의 차입금도 늘렸다. 저금리정책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돈을 빌려주기도 빌리기도 쉬운 상황이 발생해 있었다. 주식이나 토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고 융자받은 돈을 다시 토지 투기, 주식 투기에 돌리는 어리석은 자산의 명목까지 확장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에게도 만연했다."

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실질적인 생산의 증가 없이 자산가격이 나선형으로 오르는 현상을 거품이라고 할 때, 최근 들어 한국 경제에서 거품현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곳은 부동산시장이다. 전국의 토지가격이

경제 위기의 반복을 우려한다

올해만 18.6% 상승했고 아파트 가격 상승액은 수백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새로운 아파트 공급물량이 늘어선다 아니라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결과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잡았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사용가치에 집착하면서 1980년대 후반 일본 정부처럼 안정하게 낮은 이자율 정책을 고수하여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이에, 주택시장은 이미 자산을 가진 '서민'이 담보자산에 관심이 있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 거품의 과정에 돌입했다.

작금의 한국경제 상황은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0년대 후반 한국경제와도 흡사하다. 당시의 경제위기의 저변에는 부채비율을 300% 이상 안고서도 다른 기업들이 이익을 내는 '레드 오션'에 사업다각화란 명분으로 저돌적으로 뛰어들던 기업들과 단기외채를 들여와서라도 기업에 사업확장의 욕구를 채워준 은행들의 돈놀이가 함께 있었다. 작금에는 금융비용 부담을 미국보다 높게 지면서도 확실하게 돈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믿고 부동산에 투자

하는 능률한 가장들이 당시의 기업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전의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바닥이 났지만 현재는 외환보유고가 많아 걱정이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지난 11일 발표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한국의 단기외채가 최근에 급속도로 증가하여, 절대액에서는 외환위기 때보다 많아졌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중도 2004년에 28%에서 2006년 3사분기에는 47.5%로 증가했다. 김경삼 전권의 말기에는 한국경제에 대

한 약간의 신뢰 저하가 단기외채의 대출차환(rollover)의 중단과 상환압력으로 이어졌다. 기업에 원화로 장기대출을 해준 은행은 대출채권만 가지고 있을 뿐 적절히 상환할 능력을 찾지 못했고 정부도 역부족이었다. 만약 노무현 정권의 말기에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같은 거품붕괴의 조짐이 보이면, 가계에 원화로 장기대출해준 은행은 다시 대출채권만을 손에 들고 정부만 차다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일본의 거품과 한국경제에 대한 환상은 오래가지 않아 붕괴되었다. 그것들이 붕괴된 직후에 받는 고통은 자산가치의 상승에 참여하지 못했던 서민들이 부담하였다. 고통의 긴 그늘을 거치면서, 장미빛 환상을 걷어내고 투명성과 원칙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체제를 세우는 때를 겪는 아픔을 감내해야 했다.

거품과 환상을 걷어내는 투명하고 세심한 경제정책을 미리 쓸 수는 없을 것이다. 환상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는 정치계절을 맞아, 또는 대신 드러내놓고 중요한 몇 가지만을 확실히 챙기는 현 정권의 지혜를 기대해본다.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여론 무시' 광주시의회 시민 안중에 없나

최근 광주시의회 행태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시의회는 지난 7월 출범부터 두 파로 나뉘어 사사건건 충돌, 원구성부터 파행을 겪고 법과 여론을 무시한 독선적인 운영을 일삼는 등 지금까지 파행의 연속이었다.

광주시의회는 유급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고집하다 망신만 당했다. 시의회에 결핵특위는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보좌관제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박광대 광주시장의 '부동의'에 따라 좌절됐다.

인턴보좌관제는 현행법상 위법이고 대다수 시민이 반대하고 있다. 타 시·도 의회도 도입을 유보하거나 포기한 상태다. 그럼에도, 광주시의회가 도입을 끝까지 고집한 것은 법과 여론을 무시한 오만과 독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리욱이 보좌관제를 놓고 의원끼리 욕설과 주먹다짐을 벌이는 불쌍사나운 모습을 연출해 자질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오죽하면 공무원노조까지 나서 시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시민단체에 석고대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는가.

시의회는 계속되는 파행과 일탈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14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19명의 시의원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친 집행부, 반 집행부 두 파로 나뉘어 사사건건 충돌하는 것은 시민은 안중에 없는 오만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보좌관제를 둘러싼 시의회 파행은 광주시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보좌관제 관련 예산은 시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장이 동의하지 않으려 했다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했다.

시의회는 지금부터라도 재정신을 차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더 이상의 오만과 독선을 연출해 자질마저 의심케 하고 있는 시민들이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 엑스포유치단 첫 해외활동 기대 크다

2012 여수엑스포(EXPO·세계박람회) 유치전이 본격화됐다.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18~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40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 대표단을 파견해 박람회 준비상황을 설명하는 첫 프리젠테이션을 갖는다.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외교전에 돌입한 것이다.

엑스포는 월드컵 및 올림픽과 더불어 3대 국제행사다. 엑스포는 산업기술발전과 국가인지도 향상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각국이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치위원회는 엑스포를 개최하면 생산유발효과 11조원과 고용창출 16만명의 효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황은 결코 유리하지 않다. 경쟁상대는 모로코의 탕헤르와 폴란드 브로츠와프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및 이슬람권 첫 후보지라는 점에서 최대의 경쟁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폴란드도 유럽

연합의 전폭적 지원을 가정하면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더군다나 2010엑스포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현실에서 2012 엑스포마저 동등국가에 쫓겨야 되겠느냐는 견제시라도 있다고 한다.

여수는 4년 전 결선투표에서 상하이에 밀린 쓰러린 경험이 있다. 당시 정치권과 정부는 대선 바람에 휩쓸려 엑스포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낙관론을 파다 개최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올해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선 예비주자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정치권은 정계개편 논란에 함몰돼 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도 부정적 요인이다.

정부는 2010엑스포 여수 유치의 실패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정치권의 전폭적 지원이다. 개최지는 내년 12월 결정된다. 이번 대표단 파견은 정부가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 외교전에 나서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죽음이 감히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비밀스런 죽음의 집으로 달려간다면, 그것은 죄일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의 의문처럼 자살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법 철학의 가장 오래된 부분 중 하나다. 중세 유럽에서는 자살을 기독교 계율을 어긴 범죄로 취급했다. 19세기 들어서 '생명은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이라는 사고가 자리잡으면서 생명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됐다. 우리 형법도 자살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자살에 성공할 경우 처벌할 수도 없지만).

자살과 유사하지만 성격이 다른 안락사가 있다. 안락사는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이르게 하는 것이다. 자살과 달리 안락사는 안락사 시행자에게 살인 또는 자살장조라는 범죄 혐의를 안겨준다.

역사적으로 안락사 논쟁의 원조격은 1976년 미국에서 벌어진 식물인간 카렌 앤 켈란을 둘러싼 재판. 켈란의 부모는

"사람의 생명을 억지로 연장하는 것만 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은 없다"며 카렌의 안락사를 주장했다. 미국 대법원은 "국가가 카렌에게 식물인간이라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강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회복불능의 근육성염영양증 환자 피에르 조르조 웰비의 '죽음 권리'를 둘러싸고 이탈리아가 현재 논쟁에 빠져 있다.

법원은 웰비의 안락사 청원을 기각했고, 고통정도 절대 불가를 천명했지만 논란은 이탈리아를 휩쓸고 있다.

안락사는 웰비 못지 않게 중요한 웰다잉(Well-dying), 즉 '잘 죽는 것'과 연결된다. 미국의 자연주의자 스킷 니어링(1983년 99세로 사망)의 유서를 인용한다.

"죽음 병이 오면 나는 어떤 의사와 곁에 없기를 바란다. 죽음이 다가오면 나는 음식과 마실 것을 끊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마음과 행동에 조율함, 위엄, 이해, 기쁨과 평화로움을 갖춰 죽음을 경험을 나누기 바란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안락사



기고

송민석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남이 갈수록 교권은 추락하고, 선생님들은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 첫 교장으로 승진하여 중학교로 발령을 받고 보니 의외로 중학교 남학생들이 후배들을 괴롭히는 자질한 일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수모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사의 권위가 바로 서려면 교권이 바로 서야 하는데, 그것을 떠받쳐 주는 것이 바로 학부모이다. 교직은 학부모로부터의 신뢰를 먹고 자란다.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교사가 신뢰를 잃으면 교권도 없고, 교직도 없다. 신뢰는 강요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신뢰

다. 철학과 교과서에 의존하며 지금까지 주입식 수업을 해온 교사위주의 일제식 수업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학생들의 요구수준과 눈높이에 맞게 가르칠 때 비로소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교사의 권위나 신뢰는 응원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더 그렇다. 평교사로 정년퇴임한 어느 선생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본적이 있다. "수업은 '내가 절대'라는 착각에 경솔과 독단으로 반성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군림한 것 같습니다. 젊어서는 '선생님' 소리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으로 담방대다가 나이 들어서 요령과 타성으로 어영부영 시간만 때운 것 같

교사 분발없인 교권 없다

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이 상호간의 배려와 존중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학교도 달라져야 한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관료적 사고방식과 구태의연한 교육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공교육은 결코 개선될 수 없다. 교직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우선 교사는 학부모와의 면담과 대화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학부모들과 상호 공감 속에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비로소 신뢰회복이 가능하다.

학교와 선생님을 불신하는 풍토 속에서 교육은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 학교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장이나 교사 할 것 없이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학부모와 자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가르치는 권위를 얻어내려면, 부단히 연구하는 가운데 가르치는 방식부터 바꾸어야 한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교실수업 붕괴 원인은 달라도 해결책의 하나가 바로 교실 수업방법 개선에 있다고 본다. 현재 교원평가 논란을 떠나 당장 설문지를 통해 자신의 수업반응을 검증해 보라. 뜻밖에 충격적이면서도 유익한 반성자료를 얻게 될 것이다. 또 자기 수업장면을 녹화하여 동료 교사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로 수업의 질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교육 불만감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세계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원단체들도 집단이기주의나 기득권 지키기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존립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전화를 통해서 학부모와 자주 대화를 하고 공교육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명심하자.

<여천고등학교 교장>

업주들 야식배달 아르바이트생 안전 나몰라라

급한 일 때문에 밤 11시가 넘는 시각에 차를 가지고 출근하다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오토바이 한대가 내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깜짝놀라 뒤쳐나가보니 대학교 1학년이라는 앳된 젊은이가 헬멧도 쓰지 않고 야식을 배달하다가 그만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내 차를 들이받았다. 크게 다치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학생을 병원으로 신고 가면서 야식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헬멧도 없이 위험하게 질주하는냐고 물었더니 그 학생은 "야식집 주인이 웬만한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을 같은 교통법규는 대내해 준다"고 했다. 그러니

단속하러면 하라는 식으로 빨리빨리 다니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의 안전보다는 차라리 한번 더 배달해서 돈을 벌어 오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오토바이는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사고에 비해 손질 확률이 2~3배나 높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어른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채우기보다 청소년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는 양심부터 갖추자.

▲김정승·광주시 북구 운영동

법조칼럼

강행욱



지난 11월 28일, 제48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는데, 심층면접을 받은 2차 합격자 26명 가운데 8명이 3차 면접시험에서 떨어지는 희귀한 사태가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사법시험 3차에서 탈락한 수험생이 1명에 불과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큰 논쟁을 불러 일으킬만한 사건이었다. 필자가 합격한 제26회 사법시험 때에도 2차에 353명이 합격하여 50여명이 면접에서 탈락한 바가 있으나, 두세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2차 성적 300등을 벗어나는 수험생이 탈락했기에 큰 사회적 문제는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탈락한 응시자 중에는 사법시험 성적이 100여명 정도로 우수

인 답변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공격적 질문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당직자 3명이 면접관으로 나온 것 같았다" "준법서약서를 강요당하고 답변한 사람, '북핵은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 법무부 발표는 더욱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면접시험은 서울 퍼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때에도 없었던 일이다. 당시에도 학생운동에 관여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판공자 임용 때에 불라도 사법시험 합격에는 장애요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수심대의 경쟁을 뚫고 2차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그 자체로 이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은 검증되었다고 볼 것이다. 오랜 수험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칠대로 지친 그들에게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여 바로 대답하지 못하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수험생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할 일이 아니다. 아직은 인성과 전문지식 응용능력이 미약한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훌륭한 법조선배들로 교수진이 짜여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더 연찬을 받고 비로서 사회에 봉사할 법조인이 되는 것이다. 내년에는 면접시험 방식이 개선되어 '앞으로 법률가가 되면 우리 사회 양극화·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답변한 다소 엉뚱한 수험생도 구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변호사>

면접시험 인가, 사상검증 인가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 당사자는 물론 그 부모형제들이 겪었을 충격과 고통은 고시에 한 두번이라도 실패해 본 사람은 가히 짐작이 갈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면접 평가요소로서 국가관·사명감 등 윤리의식,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그밖의 발전가능성을 보았고, 이번엔 응시자의 국가관이나 사상적 문제 때문에 불합격한 경우는 없고 전문지식의 부족이나 태도불량 등이 탈락사유가 되었다고 소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면접시험을 치른 합격자들이 만나 본 결과 법무부의 발표는 믿기 어려웠다. 면접관들은 "군사상 주적은 어디인가" "대한민국에서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보나" "금강산 관광을 계속해야 하나" "반미정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사상검증을 하는 듯한 질문을 해놓고, 이에 대해 보수적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판공자 임용 때에 불라도 사법시험 합격에는 장애요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수심대의 경쟁을 뚫고 2차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그 자체로 이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은 검증되었다고 볼 것이다. 오랜 수험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칠대로 지친 그들에게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여 바로 대답하지 못하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수험생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할 일이 아니다. 아직은 인성과 전문지식 응용능력이 미약한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훌륭한 법조선배들로 교수진이 짜여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더 연찬을 받고 비로서 사회에 봉사할 법조인이 되는 것이다. 내년에는 면접시험 방식이 개선되어 '앞으로 법률가가 되면 우리 사회 양극화·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답변한 다소 엉뚱한 수험생도 구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변호사>

광주일보를 읽고

청소년에 유해한 단어, 신문에 나와서야

광주일보 12월 13일자 7면 쌍나팔 '보도광 도우미 모델서 알몸 투신 중상'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기사를 보고 놀라웠다. 인터넷에서 '보도광'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 또는 청소년에게 제공하기 부적합한 내용'이라며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나온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서 따온 것이다. 그런데 광주일보가 이런 단어를 신문에 지면에 사용할 수 있는가. 기자가 이런 단어를 올렸더라도 이를 보는 데스크나 편집 기자가 걸러내야 한다. 신문 제작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김태희·인터넷 독자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독자선정·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외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경 제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7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8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178)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 동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